2025년 4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o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임윤주	4/6	[뉴스특보] 산불 연기, 호흡기에 치명타…"작은 증상에도 병원 가야" [뉴스특보] '여의도 3배' 울산 최악의 산불…128시간만에 끝	
김홍태	4/13	[뉴스특보]선고 시작 22분만에 尹 파면…재판관 8명 전원 일치 [뉴스리뷰]비상계엄 '위헌·위법' 인정…내란 형사재판 전망은	
임윤주	4/20	[뉴스특보]신조어 띄우고 서태지 소환까지…출사표 말말말 [뉴스포커스]한국, 마지막 미수교국 시리아와 수교…조태열 "역사적 이정표"	
최미연	4/27	[뉴스특보]민주 대선 후보 선출 D-5…"호남·수도권 표심 잡아라" [뉴스특보]국민의힘, 1차 통과 4명 발표…빅3에 안철수까지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2023. 01. 31	-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5 4/6(일)	임윤주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현황과 피해에 대해 보도하기 위해 일주일이 넘게 연합뉴스TV의 많은 인력이 최선을 다했는데요.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영남 지방의 많은 지역을 직접 찾아, 산불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본 보도 역시 울산의 산불 시작 추정 지역을 찾아 현장의 모습을 실감나게 전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 전달을 위해 대비 면적을 '여의도' 면적으로 두었는데요. 해당 표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뉴스에서 여의도 면적에 비교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어, 대다수 시청자에게는 대비의 기준이 되는 여의도 면적에 대한 정보가	금번 영남권 산불 보도와 관련해 대부분은 피해면적을 일반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축구장 면적을 대비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피해면적이 대폭 확대되면서 일부는 여의도 면적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축구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여의도 면적도 병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의 또 다른 산불 보도에서는 '축구장'을 대비 면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서울 지역에 위치한 여의도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중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비슷한 보도를 전할 경우, 해당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5 4/13(일)	김홍태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이 증인 신문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방송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들이 공소장에 적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주요 사실관계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이 탄핵 재판보다 범죄 증명을 엄격이 따진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탄핵 선고 당시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좀 더 엄격한 구성요건 해당성의 판단이 이뤄지기도 하고,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현재가 인정한 위헌적 위법적 사실관계와 그리고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인정한	해당 리포트는 헌재 선고 당일이 아니라 이틀 뒤 주말에 박스성으로 제작한 리포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갈리는 의견은 4일 선고 당일 리포트에 반영이 되었고 위 리포트는 헌재 판결보다는 향후 내란 형사재판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어서 리포트 분량 등을 고려해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불초수특권 관련 향후 수사 확대 부분 역시 해당 리포트에는 분량 등을 고려해 넣지 못했지만 다른 리포트에서 수차례 다뤘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만큼 내란죄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수사와 소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2025 4/20(일)	임윤주	다음은 교사 폭행 영상에 대해 보도한 <뉴스 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을텐데요. 교권 하락 등을 포함하여, 수업 내 휴대전화 사용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상 자체가 충격적이었는데요, 본 보도에서는 영상을 일부 편집하여 가장 충격적인 폭행 장면은 제외되었습니다. 폭행 등 사건 사고 장면을 전달하는 데 있어, 해당 영상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의 전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본 보도 외 다른 보도에서 영상 전체와 함께 폭행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요, 향후 비슷한 보도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폭행 장면 묘사를 최대한 배제하려 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25 4/27(일)	최미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통상협의'가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단순한 협의를 넘어 경제안보 협력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역균형, 조선, LNG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미 통상협의가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만큼, 한국	해당 기사는 통상협의를 예고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을 전한 단신 기사여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상세히 담긴 어려웠습니다. 그런 내용은 경제부 기사에 일정 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입체적이고 충실한 기사를

		의 글로벌 통상 파트너로서의 위상 강화와 함께, 향후 정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한 대행은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통한 양국 동맹의 다각적 발전을 언급하며, 이를 신산업 분야 협력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 보도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경제안보와 신산업 협력이라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 중대한 외교·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이슈일수록 언론이 취해야 할 보도 방향은 보다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안보'라는 용어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경제안보인지, 이번 협의가 공급망 안정, 핵심 자원 확보, 첨단기술 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 보도가 필요합니다. 단순 외교 이벤트가 아닌, 한국 경제의 전략적 방향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해 국민들이 협상의 본질, 경제적 파급력, 그리고 장기적 전략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5. 04. 0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9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불은 진화되었지만, 재발화 가능성도 있어 피해 복구는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피해에 대해서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전했는데요,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불 화재 연기에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등 다양한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유해 물질은 호흡기는 물론, 심혈관 질환과 면역체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도는, 연기가 많은 곳에 머물렀다면 증상이 크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층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불 연기 흡입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각종 감염병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화재로 인한 연기 등이 발생할 경우, 내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문과 창문을 수시로 닦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연기가 보일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창문틀 등 공기가 통하는 틈새를 젖은 수건이나 천으로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해야 하고, 안구 질환 예방을 위해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대형 산불로 인한 다양한 피해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에 초점을 두고 전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의 피해 복구가 최우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본 보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후속 조치는 지역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응 방안 가운데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어 실용적인 보도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최초로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기자가 직접 상황을 전했습니다. 화재는 야산 연접지에서 용접을 하다가 발화된 걸로 추정되는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불이 삽시간에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931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많게는 2,400여 명의 인력과 헬기 16대가 동원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울산에선 화재를 진압하던 시청 공무원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면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현황과 피해에 대해 보도하기 위해 일주일이 넘게 연합뉴스TV의 많은 인력이 최선을 다했는데요.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영남 지방의 많은 지역을 직접 찾아, 산불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본 보도 역시 울산의 산불 시작 추정 지역을 찾아 현장의 모습을 실감나게 전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 전달을 위해 대비 면적을 '여

의도' 면적으로 두었는데요. 해당 표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뉴스에서 여의도 면적에 비교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어, 대다수 시청자에게는 대비의 기준이 되는 여의도 면적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의 또 다른 산불 보도에서는 '축구장'을 대비 면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서울 지역에 위치한 여의도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중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비슷한 보도를 전할 경우, 해당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땅꺼짐과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 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규모 땅 꺼짐 사고가 일어나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강동구청이 관리에 나섰습니다. 지표투과레이더를 이용해 지하에 빈 곳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틀간 사고 현장 일대 지하 구간을 점검하고 빈 구멍이 발견되면 복구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땅꺼짐 사고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도로 밑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가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수도관 손상은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5년 새 전국에서 1천 건 가까운 땅 꺼짐이 일어났는데, 절반 이상은 망가진 수도관 때문이었습니다. 고압으로 뿜어 나온 물에 주변의 흙이 깎이면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 아래에서 이뤄졌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원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로 깊이 파고드는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지속적인 계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땅 꺼짐 사고로 인해 연합뉴스TV에서는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다양한 보도를 전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본 보도는 기사 제목에서 '대책'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다양한 발생 원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도움이 되었으나, 이러한 원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덧붙였다면 보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더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가 언급하였듯, 이런 땅 꺼짐 사고는 최근이 아닌 거의 해마다 계속되고 있어, 현재 정부나 지자체 단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나 실효성에 대해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재산 공개와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 센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신고내역입니다. 국회의원 10명 중 거의 8명은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며 올해도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1억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민주당 이병진 의원과 진선미 의원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54명, 전체 신고 대상의 18%에 달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20명, 개혁신당이 1명이었습니다. 재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보유 주택 가격 상승이라고 전했습니다.

본 보도를 계기로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찾아보았는데요. 국회에서 공개한 원자료와 함께 다양한 관련 보도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 재산 정보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따라서 알아야 할 정보지만 공개되는 정보가 많아 오히려 어떻게 정보를 취합하여 이해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본 보도 외 관련 뉴스를 2건 이상을 보도하는 등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했습니다. 특히 본 보도는 국회의원의 주택 보유 내역 가운데 강남 3구에 집중하여 정리하였고,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이 재산 증가의 배경이 되었다고 덧붙여 정보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배우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고 김새론 유족 측이 모 유튜버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단호히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유족 측 변호사의 기자회견에서 제시되면서 '미성년 그루밍 의혹'이 타올랐던 카카오톡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김수현의 소속사가 2차 내용증명 등으로 채무압박을 가해 고인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한편, 과거 드라마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두 사람의 열애설이 제기된 것을 두고 부정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비겁했다고 비판한다면 얼마든지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내포하고 있을 수 있는 심각성 보다는 흥미나 자극을 추구하는 폭로성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연합뉴스TV는 비교적 정제된 보도를 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도 대부분이 기사 제목이나 보도 내용이 자극적이지 않고 사건 자체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보도 역시 쟁점 위주로 기자회견을 정리해 전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으로는 기사 제목에서 '증거 대 증거'로 강조한 만큼, 양측의 증거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했다면 쟁점 정리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5. 04. 1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9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4일 뉴스특보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고, 8년 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는 38일 간의 역대 최장 평의로 여러 추측이 무성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 결과는 8대 0. 전원 일치 인용이었다고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오기까

지는 선고 개시 후 2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주문 낭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 부로 대통령 직위를 잃게 됐는데요. 파면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 파면 결정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기자는 헌재는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는데요, 먼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중대한 위기상황이 지난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무위원 서명 없이 선포했다며 당시 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군인을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령 발령은 헌법과 계엄법 위반,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 법조인 위치 확인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국회 측이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엄 선포로 사회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고,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한 만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을 사실이라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고, 주요 정치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며,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내란죄 철회 논란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도 국회의 재량이자 다른 회기에 진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일축했는데요. 만약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법률안 재의요구, 대화와 타협 등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지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기자가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와 전원일치 결정을 이끈 핵심 쟁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이뤄지는데요, 먼저 탄핵 소추가 가능한지 즉 적법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추가 가능하다면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는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체적인 측면에서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위반이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적법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요,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인데요,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

고 하였습니다. 그후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를 소추사유별로 검토하였는데요, '계엄 선포' '국회의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이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 모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는,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보면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탄핵소추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번 탄핵 선고와 관련하여, 정치적 해석이나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과 판결문 내용에 기반해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방송으로서 매우 중요해 보이며, 시청자들이 법적 쟁점과 헌재의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뉴스리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국회를 전면 통제하란 지시를 받았다는 군·경 지휘부의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관위 불법 압수수색과 법관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시도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걸친 의혹들도 사실로 인정하며, 모두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는데요, 헌재 판단이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주요 사실관계와 맞닿아 있어 앞으로의 형사 재판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무장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한 정황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헌재가 사실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인정했다는 해석도 있다는데요, 다만 형사 재판은 탄핵 재판보다 범죄 증명을 보다 엄격히 따지는 만큼 일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향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관건이란 전망을 전했습니다.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이 증인 신문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방송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들이 공소장에 적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주요 사실관계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이 탄핵 재판보다 범죄 증명을 엄격이 따진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탄핵 선고 당시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좀 더 엄격한 구성요건 해당성의 판단이 이뤄지기도 하고,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헌재가 인정한 위헌적 위법적 사실관계와 그리고 법위반 행위가 피청

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만큼 내란죄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수사와 소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6일 보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선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 시점에 대하여도 전했습니다. 기자는 국회에서 소식을 전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본격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고 하면서, 김윤덕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조속한 선거일 공고와 정치적 중립 선언을 촉구했다고 전했는데요, 김 사무총장이 '절제된 자세'를 강조하며 통합과 안정, 새로운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얘기한 것을 전했습니다.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가 지정되고, 이 대표도 9일쯤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데요, 민주당은 연일 '국민의힘 책임론'도 부각하며, 대선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전략도 함께 짜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8개 법안의 재의결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는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며 사죄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데요, 김두관 전 의원은 당 내에서 처음으로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대선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지만,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도 윤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을 뒤로 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엔 자숙의 시간을 가졌지만, 최장 60일의 단기 대선 레이스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상황이 시급하단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반성의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이재명 세력'에 차기 정권을 넘겨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부각해 불리한 여론 지형을 극복하려는 데 집중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층과 보수층의 거부 정서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지지층을 다시금 결집해보겠다는 전략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도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섰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 시장직을 사퇴할 예정으로, 사실상 대권 행보에 돌입했고요.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행보로 경북 칠곡군 청구공원묘지의 조부모 산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도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마를 고심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조기 대선 일정과 그에 따른 정치권 움직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정당과 주자별 전략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와 함께 특검법 재추진 등 입법 전략을 병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 기조 속에서 빠른 재정비와 중도층 공략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양상을 좀 더 균형 있게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주자들의 행보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해석을 덧붙이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보입니다. 정당 간 유불리를 단정하거나 특정 인물 중심의 과도한 해석을 지양하고 객관적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혼란 없이 진행되기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 방안과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정치 문화 정착의 필요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5. 04. 2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9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기 대선 정국에 들어섰는데요. 빠른 시일 내 적절한 후보자를 골라내야 하는 건,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주요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주요 후보자의 출사표에 주목하여 보도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전통적 지지층에서 중도·보수층으로까지 표심을 확장하겠단 전략으로,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신조어 '잘사니즘'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주자들은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란 뜻의 '어대명'으론 안 된다고 강조했고, 그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한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상대적으로 개헌에 소극적 입장인 이 전 대표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시대 교체'를 해내겠다며, 민주당에 정권을 넘기면 안된다는 데 메시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기 위해 '깨끗함'을 부각하거나, '지피지기'를 내세운 후보도 있었습니다. 출마자가 두 자릿수로 예상되는 만큼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한 키워드 발굴도 눈에 띕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대 교체를 외치면서 문화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태지'를 소환하는가 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선은 제2의 6.25전쟁, 건국 전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대선의 비장함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압도적 새로움'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젊음을 강조했습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늘 중요한 문제로 강조되어 왔지만, 이번 대선은 더욱 특별한데요.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60일 이내 선거가 이루어져야 해, 6월 3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후보자들을 짧은 시간 내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피로도가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보도는 국민의 대선 관심도를 유지하고 주요 후보자의 전반적인 기조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우면서 의미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공약 만큼이나 후보자의 언행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랫동안 정치권 및 언론에서 사용되어 온 말이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의 경우에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등, 본 보도는 후보자들의 말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리아와의 수교에 대해 전한 <뉴스포커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정권이 나간 자리에 들어선

시리아의 과도정부. 우리 정부는 시리아 과도정부 측과 접촉해 수교 의사를 확인한 뒤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표단과 함께 시리아를 방문해 시리아 외교장관을 만나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있던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는 1966년 북한과 공식 수교했지만 우리와는 반세기 넘게 외교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도정부와 정식으로 수교를 맺으면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는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리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으면서 외교적 지평을 넓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로서도 쿠바에 이어 시리아까지, 유엔 회원국 수교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소 불안정한 소식들만 전해졌었는데요.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하락한 국가 이미지로 국제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본 보도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외교적 성과를 잘 정리하여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본 보도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들을 여러 기사를 통해 전했는데요. 그 가운데 본 보도는 특히 시리아와의 수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음은 ESG 경영으로 특수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보도한 <뉴스 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수차례 검수를 거쳐 만들어지고 있는 조그마한 기저귀는 이른둥이를 위한 작은 기저귀입니다. 이 공장에선 약 2개월에 한 번씩 이른둥이용 기저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둥이는 몸집이 작고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전용 설비가 필요하고 품질 관리도 더욱 엄격히 이뤄집니다. 그럼에도 생산을 이어가는 건, 이 기저귀를 필요로 하는 아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둥이 기저귀는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도 무상 공급돼 아기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업계의 특수 제품 생산을 위한 행보는 일찍이 시작됐습니다. 한 유업회사는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수 분유를 개발해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제조사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한 식품기업은 환자용 영양식 브랜드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상업성보다 ESG 경영을 고려한 유통업계의 특수제품이 사회 곳곳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본 보도는 적절한 화면 구성과 기사 내용,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었습니다. 보도 첫 부분에서 기자가 직접 공장을 찾아 손으로 기저귀를 들어 보였을 때, 실제로 얼마나 작은 기저귀인지 직접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기사를 전하기 전 앵커가 이른둥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었을 뿐 아니라, 보도가 전해지는 동안에는 자료화면 자막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른둥이 전용 물품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전문가 인터뷰는 본 보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보도에서 인터뷰에 응한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사회적으로도 제품 생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도는 제품 생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킥보드 없는 거리에 대해 보도한 <뉴스 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인 4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한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의 한 도로지만,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들이 도로 위를 질주하고, 인도 곳곳에는 킥보드 여러 대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킥보드 이용자를 단속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로 전광판에도 킥보드 운행을 금지한다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달부터 운행이 제한된다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아는 시민들은 적습니다. 이달부터 학원가 밀집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한 서울 서초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단속 주체인 경찰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단속 방식, 시행 기간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하루 빨리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 보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정책 진행에 대한 감시 역할도 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TV에서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건·사고를 해당 정책과 함께 전해왔습니다. 특히 본 보도는 실제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일부 거리를 찾아 정책의 시행 여부를 직접 확인했는데요.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해당 정책에 대해 인지하게 하는 한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관련 기관에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사 폭행 영상에 대해 보도한 <뉴스 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을텐데요. 교권 하락 등을 포함하여, 수업 내 휴대전화 사용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상 자체가 충격적이었는데요, 본 보도에서는 영상을 일부 편집하여 가장 충격적인 폭행 장면은 제외되었습니다. 폭행 등 사건 사고 장면을 전달하는 데 있어, 해당 영상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의 전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본 보도 외 다른 보도에서 영상 전체와 함께 폭행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요, 향후 비슷한 보도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5. 04. 27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0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본격적인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표심 잡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호남과 수도권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 1강 구도를 유지하며 SNS로 환경 및 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했고, 호남 순회 일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호남의 사위'를 내세워 지역 예산 자율권을 강조했으며,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 개발과 비정규직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은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며 8명의 후보 중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한동훈 후보와 반대파인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2대 2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후보들은 사흘간 토론회를 진행하며, 이후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투표(각 50%)를 통해 2차 컷오프가 진행됩니다. 최종 후보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되며,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 시 결선 없이 확정됩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여야의 경선 레이스 본격화를 전하며, 후보들의 전략과 구도를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선 보도의 공식을 따르듯이, "호남·수도권 표심 공략", "이재명 1강", "4강 확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표심, 계파 대결, 진출자 발표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보도는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결국 정치가 정책 경쟁이 아닌 인물 경쟁으로 소비되는 문제를 반복합니다. 따라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심층 보도가 이어진다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등으로 국가의 경제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의 한미 통상협의가 과연 우리 경제에 봄을 가져다 줄지, 단순 협의를 넘어 경제안보 협의체로써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통상협의'가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단순한 협의를 넘어 경제안보 협력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역균형, 조선, LNG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미 통상협의가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만큼, 한국의 글로벌 통상 파트너로서의 위상 강화와 함께, 향후 정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한 대행은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통한 양국 동맹의 다각적 발전을 언급하며, 이를 신산업 분야 협력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 보도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경제안보와 신산업 협력이라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 중대한 외교·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이슈일수록 언론이 취해야 할 보도 방향은 보다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안보'라는 용어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경제안보인지, 이번 협의가 공급망 안정, 핵심 자원 확보, 첨단기술 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 보도가 필요합니다. 단순 외교

이벤트가 아닌, 한국 경제의 전략적 방향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해 국민들이 협상의 본질, 경제적 파급력, 그리고 장기적 전략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의대 정원 논의와 의료계 갈등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추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2027학년도 정원은 이번 추계위 논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한편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강경파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철폐하라며 장외 집회를 벌이며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필수 의료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의대 증원 정책이 폐기되어야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중단하고, 수업 불참 시 유급 처리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대규모 유급 사태와 수업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의료 정책과 인력 수급 문제는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부족에 대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보도는 의료정책 갈등과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공공정책 이슈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구도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보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보다 심층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공백 문제, 의료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아 여론의 균형을 맞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시각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잇따른 땅 꺼짐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용인, 부산, 광주 등지에서 반복되는 땅꺼짐 사고와 관리 부실은 시민들에게 근본적인 불안을 안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이들 사고의 원인과 대응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싱크홀이 아닌, 도로가 패인 '포트홀' 수준으로, 인명 피해나 차량 파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를 지나는 온수 배관이 파열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파손 범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 공사구간의 대형 땅 꺼짐이 부산교통공사의 부실한 시공사 관리 감독 등에서 비롯됐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 진행 결과, 굴착 공사 과정에서 품질·안전·시공 관리에 과실이 있었고 위법 사항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대형 땅 꺼짐이 집중호우와 더불어 차수 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시공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보도는 우리 사회의 도시 안전 관리 실태와 반복되는 인재 문제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고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은 사고 발생에 대한 정보 전달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파

악하고, 예방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인재가 드러난 경우, 관련 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과 장기적인 안전 대책을 검증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후속 보도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5년 4월 6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5년 4월 13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5년 4월 20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5년 4월 27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